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우리는 전 세계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통신 감시에 반대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원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과 브라질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결의안 초안(A/C.3/68/L.45)을 UN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만일 통과된다면, 이는 1988년 이후 최초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5년의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각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이 결의안 초안은 대량 감시가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첫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국경을 초월한 통신 감시, 감청 등 통신 감시로부터 야기되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것을 UN 총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 결의안 초안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옹호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비롯하여 불법적인 통신 감시와 감청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래서 민주 사회의 기반을 매우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 결의안 초안은 전 세계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에 대한 많은 국가 및 시민들의 분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대량 감시에 반대하며,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인권, 사회단체들이 지적해왔던 한국의 통신 감시에 대한 관행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무분별한 통신 감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실련

국제민주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슬로우뉴스

언론연대

오픈넷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함께하는시민행동